



보도 시점

2026.4.16.(목) 18:00
(2026.4.17.(금) 조간)

배포

2026.4.16.(목) 09:00

국민 돌봄부터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과학기술·인공지능 기반의 성과 창출 본격 추진

- 배경훈 부총리, 제7회 과학 기술 관계 장관회의 개최
- 부처 협업 기반 인공지능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으로 돌봄 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확보에 시동
- 중기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로그인 한 번에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까지
- 인재·연구개발·산업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 자생 성장 기반 마련
- 연구 성과 창업화의 제도 혁신과 생태계 조성으로 국민 체감 성과 확산
-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적 인공지능 강국 뒷받침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국-베트남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가속화

【관련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23-4.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디지털 보안 안전 체계 구축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91. 인구 가족 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 세대 맞춤형 지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돌봄 정책 사고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한 「인공지능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7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 안건 목록 >

- | | |
|---------------------------|--|
| ① 인공지능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 ② 중기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전환계획(안) |
| ③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 | ④ 연구개발(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 |
| ⑤ 정보보호산업 육성 방안(안) | ⑥ 한국-베트남 과학 기술 혁신 협력 종합계획(마스터플랜)(안)(비공개) |

배경훈 부총리는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HAI)가 발표한 ‘인공지능 지수 2026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①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수 3위, ② 인구 대비 인공지능 특허 수 연속 1위, ③ 인공지능 도입률 상승 폭 1위 등 혁신 역량과 인공지능 확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소개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세계 인공지능 3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기업, 지역 모두가 과학기술 혁신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혜택과 성과를 골고루 누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한 층 속도를 높ی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고성능 보안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모델의 공개 쟁점(이슈)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믿어온 보안 체계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흔들림 없는 사이버보안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추후 공급망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출연연 등이 개발한 원유·납사 대체·저감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화학공장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과기 장관회의에서는 분야별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전략 실행계획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통한 돌봄 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및 내부 정책 집행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중기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계획(안)」이 확정되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과 확산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 연구자를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져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 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 연구 성과의 창업화 장벽을 덜어내는 제도 혁신과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을 담은 「연구개발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이 의결되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이 인공지능 확산의 위험(리스크)으로 급부상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세계적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보호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방안(안)」,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상호호혜적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위한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혁신 협력 종합계획(마스터플랜)(안)」을 확정하여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안건 1> 인공지능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제1호 안건으로는 「인공지능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이 심의·의결되었다. 동 전략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사고 체계(패러다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해법,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이라는 미래상(비전) 하에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①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②기술의 개발·실증·확산 지원, ③법·제도 정비 및 현장 역량 강화

첫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공학(로보틱스)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재가 돌봄 대상자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능형 가정(스마트 홈)을 구축하고, 지능형(스마트) 사회복지 시설을 통하여 종사자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품질을 높인다.

둘째,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돌봄 기술의 개발·실증 및 확산을 지원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복지부 협업에 기반하여 돌봄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유망기술이 실증·사업화를 거쳐 현장 도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돌봄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요 기반을 창출할 예정이다.

셋째, 인공지능 돌봄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돌봄 현장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인공지능 윤리를 정립하는 한편,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건 2> 중기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AI) 계획(안)

제2호 안건으로 「중기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중기부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공개하는 “중소기업 통합 이음터(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관계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인공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을 탑재한다. 사용자의 관심 공고, 상담 기록 등 개별 데이터를 학습하여 지원사업 맞춤 추천, 상권분석·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사업 공고 시점, 신청 절차 등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서 및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을 보조한다.

셋째, 벤처·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프로젝트)(제2회 OpenData x 인공지능 경연 대회<챌린지>)을 확대한다. 사업 참여 창업 초기 기업(프로젝트 참여 스타트업)에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념 검증(PoC) 자금 및 개발 기반 시설(인프라)(그래픽 처리 장치 등)을 지원하고, 우수 결과물은 본 계약까지 체결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게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이 개발한 해결책(솔루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맞춤형 판촉(마케팅) 콘텐츠 제작 교육 등도 제공한다.

넷째, 중기부·관계기관 내부적으로는 보유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정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반복·단순 업무는 자동 처리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안건 3>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

제3호 안건으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지방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전략은 다양한 인재를 지역에 유입하여 연구개발로 성장하며,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4대 과기원과 지역대학이 협력하여 광역권 인재 양성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대학과 출연연의 지역별 특성화 연계·협력 모델 창출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동시에 지역 연구자와 연구소 지원을 확대하고, 생명 공학(바이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우주, 핵융합 등 첨단 전략기술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강화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반 기술(딥테크)창업 지원과 단계별 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과학문화 확산과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 4> “연구개발 고도화(R&D BOOST UP)” 연구개발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

제4호 안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26년 35.5조 원)가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기술 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 실행 방안인 「“연구개발 고도화(BOOST-UP)” 연구개발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논의하였다.

* (부제) 연구개발 고도화(BOOST-UP) : 부처 간 연구개발 경계를 허무는(Boundaryless) 개방형 혁신을 통해(Open-innovation) 시장으로 진출하도록(Outreach) 기술을 키우다(Scale-UP Technology)

이번 전략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담아 지난해 11월 발표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①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연구개발 성과가 성장 단계별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연구개발 성과 확산 가속도로’ 구축, ②연구자 창업 휴·겸직 활성화, 연구자 보상 방식 개선 등 연구 성과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 혁신, ③공공 기술지주회사 내실화,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기술사업화 지원조직 전문성 제고 및 역할 강화, ④한정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연구 성과의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연구개발’ 도입 등 연구 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전략을 통해 정부는 '30년까지 공공 연구 성과 기반 인공지능·기반 기술(딥테크) 창업 기업 누적 5천 개 육성을 목표로 연구개발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 확산 가속도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성과평가법」 등 관련 법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5> 정보보호산업 육성 방안(안)

과기정통부는 전방위적인 침해사고로 우리 사회의 정보 보호 체계 강화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우리 정보 보호 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 육성 방안(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30년까지 정보보호산업 매출 규모 30조 원 달성, 500억 이상 중대형 정보 보호 기업 80개 사, 수출액 5조 원 달성 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0개 과제 추진

주요 전략으로는 먼저 ①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세계 정보 보호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잠재력 있는 인공지능 보안기업을 발굴하여 전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보안기업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특화보단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인공지능 보안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② 차세대 융합보안 분야 개척 및 보안산업 육성 기반도 확대한다. 주요 전략산업별(에너지·자율차·지능형 제조<스마트제조> 등) 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융합 산업 보안 내재화 절차(프로세스) 정립 및 융합 분야별 전문 보안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정보 보호 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③ 세계 최고 수준 보안인재 양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침해사고 대응 등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화이트햇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편하고, 인공지능 보안 등 신기술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5극 3특 권역별 융합보안대학원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인재 성장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직무역량 체계 및 과학적 인재관리 이음터(플랫폼)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④ 전국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 보호 지방시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지역 협력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보안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보 보호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의 전국 확산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 6>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혁신 협력 종합계획(마스터플랜)(안) (비공개)

제6호 안건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과학기술 협력 방향을 담은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혁신 협력 종합계획(마스터플랜)(안)」이 보고되었다. 이번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은 지난 8월, 양국 정상이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후속 조치로 개발 협력 무상분야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연구 - 인력양성 - 성과 확산 - 기반 시설(인프라)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꾸러미 형(패키지형)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양국 개발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 및 혁신(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동반관계(파트너십) 사업('24~'33/3,000만 달러)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26~'30/2,000만 달러) 등

한국 과기정통부, 외교부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함께 4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번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며, 양국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액션플랜)을 올해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책임자	과장	김 연	(044-202-6480)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 협력 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황산하	(044-202-6485)
담당 부서 <안건 1>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책임자	과장	서민수	(044-202-3240)
	복지 돌봄 인공지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044-202-3247)
담당 부서 <안건 2>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책임자	과장	윤홍권	(044-202-4690)
	과학기술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신윤호	(044-202-4696)
담당 부서 <안건 3>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이호중	(044-204-7370)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4-7379)
담당 부서 <안건 4>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책임자	과장	최영실	(044-202-4740)
	지역 과학기술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장태은	(044-202-4715)
담당 부서 <안건 5>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	책임자	팀장	김주연	(044-202-6760)
	과학 기술 혁신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지현진	(044-202-6762)
			서기관	최승호	(044-202-6761)
담당 부서 <안건 6>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종혁	(044-202-6450)
	정보보호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세진	(044-202-6455)
담당 부서 <안건 6>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이경림	(044-202-4340)
	미주 아시아 협력 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044-202-4341)
	외교부 개발협력국	책임자	과장	김지수	(02-2100-8059)
	개발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김우혁	(02-2100-8350)

붙임1**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시 : '26.4.16.(목) 16:00 ~ 17: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 병행

□ 상정 안건 : 6건

	안 건 명	제출부처
1호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2호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안)	중기부
3호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	과기정통부
4호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5호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안)	과기정통부
6호	한국-베트남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안) (비공개)	관계부처 합동

□ 개 요

- 돌봄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체계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이하 AI) 등 돌봄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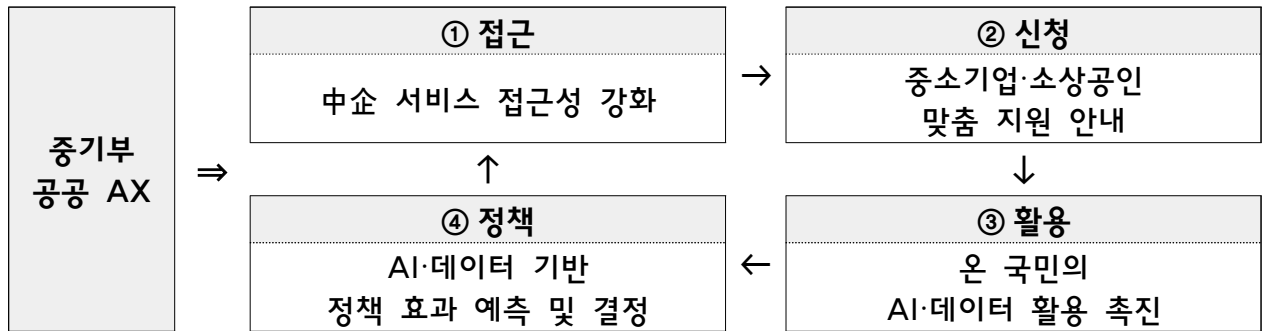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서비스]** AI·로봇 등 과학기술 접목한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 (스마트 홈)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필요기술을 통합한 기반환경 제공, 서비스 연계 → 24시간 케어 통한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
 - (스마트 시설) AI·IoT·로보틱스 등 기술 활용, 복지·요양 시설 내 일부 업무 보조·대체 → 종사자의 업무부담은 경감하고 돌봄 품질은 제고
- **[기술]** 현장수요 기반, 돌봄 기술의 개발·실증 및 확산을 적극지원
 - (개발·실증) 과기정통부-복지부 협업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역량·자원 결집, 돌봄 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구체적·실용적 R&D 추진
 - * ①비R&D데이터 수집 및 실증환경 조성('26~'27) > ②1단계 R&D돌봄특화 AI·IoT 중심 기술개발('27~'29) > ③2단계 R&D돌봄특화 피지컬 AI 및 로보틱스 등 고난이도 기술개발 ('28~'32) > ④R&D 로드맵 현장수요와 유망기술을 매칭하는 임무중심형 신규 R&D 확충
 - (현장확산) 돌봄기술 R&D → 실증·사업화 → 현장 진입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제도-현장-기술의 선순환 구조 마련
- **[기반]** AI 돌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현장 디지털 역량 강화
 - (법령·제도) 돌봄 현장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체계) 돌봄현장의 디지털·AI 대전환(DX·AX)이 가속화되도록 현장의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맞춤형 리더러시 교육 제공

□ **개 요**

- 중기부 공공 AX 전환으로,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AI·데이터 활용, 정책 집행까지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 **주요 내용**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 개별 시스템에 일일이 로그인 필요 없이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② (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AI 에이전트 탑재

-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시(통합플랫폼)부터, 기초 정보 24시간 안내 (챗봇·보이스봇), 지원사업 신청서 초안 생성·첨삭까지 제공

③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및 AI 활용 지원

- 제2회 OpenData x AI 챌린지 개최,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 AI 솔루션 지원, 소상공인에 AI 활용 교육·사업화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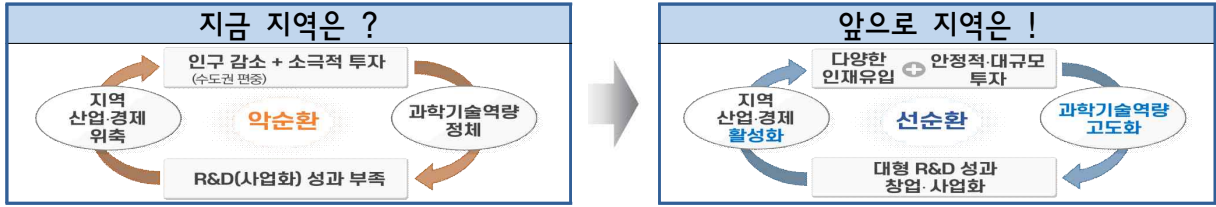
④ (정책) 중기부 및 유관기관 내부 행정 혁신

- 정책 판단 시 정량적 근거 활용 확대, 반복·단순 업무 자동 처리 하여 행정부담 완화, 대국민 서비스는 중단없이 제공

붙임4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

① R&D로 성장한 지역 인재가 ② 지역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생태계 완성



비전

과학기술로 견인하는 지방 주도 성장

목표 (~'30)	비수도권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수도권의 70% 수준('24년 44%)		
	지역 인재 2만명 증가 ('24년) 20만명 → ('30년) 22만명	지역 R&D 투자 비중 2배 ('26년) 3.96% → ('30년) 7% ↑	딥테크 기업 누적 600개 ↑ 지역 딥테크 신규 기업 수



① 지역 인재 육성·유입

과학기술로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환경 조성

- 과기원, 지역대학 협력 공동 인재양성 체계 구축
- AI 융합교육 지원 및 기업연계 인턴십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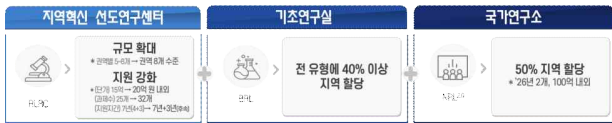
지역 수요기반 인재 유입 체계 다변화

- 은퇴 과학자(신규 사업 추진) 및 여성 유입
- 해외인재를 위한 R&D, 창업 등 지원 방안 강화

② 지역 R&D 시스템

기초·원천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기초체력 강화”

- 지역연구자(젊은교원+우수연구자) 정착 지원 강화
- 지역 우수 연구소(RLRC, NRL2.0 등) 육성



- 첨단 전략 기술분야 원천기술 기반 확보
- 바이오, 양자, SMR, 우주, 핵융합, AX 인프라 등

지역 주도 R&D로 “신산업 기술 씨앗 확보”

- 블록편당형 지역 자율 R&D 추진
- 출연연 지역조직 주도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R&D

③ 딥테크 창업·사업화 활성화

적극적 발굴+촉진한 지원으로 지역 딥테크 기업 육성

- 기초연구(리더·선도연구센터, IBS) 성과, 과기원·출연연 대형성과 발굴 → 기획형 창업 강화



- 강소특구, 과기원 중심 청년 창업 프로그램 (오디션, 펀드, 창업보육 등) 확대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

- 창업 친화 제도 정비, 실증 특례 강화
- 초기·성장 기업 단계별 펀드 조성(특구)

④ 지역 과학기술 기반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과학자본(우리동네 과학방, 우리지역 과학관, 지역 과학축전 등) 확대
- 지역 현안 해결 해커톤: 시민이 아이디어 제안→출연연·특구 R&D, 실증으로 해결
- AI 공동창업자 플랫폼 구축(과기원) 및 기술 단계별 실증 플랫폼 구축·연계

□ **개 요**

- 역대 최대 규모(35.5조원)로 편성된 정부 R&D 투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추진
- ⇒ R&D 체계 개편으로 공공 연구성과 기반 AI·딥테크 창업 기업 '30년까지 누적 5천개 육성

□ **주요 내용**

①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R&D 성과가 기술·기업 성장 단계별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 ※ 연구성과를 「기초·원천→기술스케일업→실증·사업화→시장진출」로 신속하게 연계

② 연구성과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혁신

- 연구자 창업 휴·겸직 활성화(연구자 신청시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 검토),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위한 법 개정(관련법 내 특례 마련) 등
- 기술료 보상 방식(연구자에게도 주식·지분으로 보상) 및 연구자 창업 주식·지분 보유 제한 개선(창업 이후 주식·지분의 과도한 처분없이 복직 가능) 등
- 기술이전 방식 다양화(前 통상실시 원칙, 제한적 전용실시 → 後 양도, 전용 실시, 통상실시 자율권 부여) **산업부**

③ 기술사업화 지원조직 전문성 제고 및 역할 강화

- 공공 기술지주회사 실태조사 실시 후 필요시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교육부**, 지역 성장엔진 분야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지원 **관계부처** 등 내실화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전주기를 전문 지원하는 종합전문회사 육성, 공공 연구성과 개방으로 민간의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접근성 제고 등

④ 연구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

- R&D 연구성과 회수 및 재투자가 가능한 투자형 R&D 도입, 연구 성과 확산 법·제도화, 지역 특화산업 연계 창업 활성화 등

□ **향후 계획**

-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추진계획 마련, 관련 법 개정 추진 등

◇ 지난해 해킹사고 후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투자와 역량 강화를 추진 중
 ⇒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로 삼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 마련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정보보호 종합대책」 (1차 '25.10월, 2차 '26.1월) 발표

□ **주요 내용(안)**

※ '30년까지 매출 30조원 및 수출 5조원 달성, 최정예 보안인력 9천명 확보 등 목표

① (AI 보안)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AI 정보보호 대표 기업을 발굴·육성

- (AI 특화보안) 네트워크 전 구간의 보안 위협을 AI 기반 자동 분석·대응하는 플랫폼 개발
- (AI 보안비서) 중소기업에 보안 진단·조치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기반 보안비서 개발·보급
- (물리보안 AI적용) 물리보안 제품(CCTV, 보안센서 등)에 AI를 적용하여 통합관제 기술 고도화
- (대표기업 육성) 제품개발 및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 지원으로 대표 보안기업 육성

② (보안산업 기반) 산업 전반에 보안 내재화를 위한 기반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에너지·선박·로봇 등 주요 산업으로 보안산업 저변 확장

- (융합 기반) 주요 산업별 보안 내재화를 위한 협력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산업별 핵심 보안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
- (제품·산업) IP카메라 등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스마트 인버터 등 산업 핵심부품 대상 보안 가이드 개발 및 점검, 관련 보안인증 제도 도입
- (SW 공급망) SW 개발·공급 전 과정에서 공격에 대한 예방·대응 등 위협관리 체계 마련
- (해외 진출) 대형 해외 보안 사업 수주 후 국내기업이 참여하여 K-보안모델을 전파하고, 정보보호 해외 전략 거점 개편(베트남→중양아시아, 아프리카 등)

③ (인재 양성) 산업현장이 원하는 화이트해커·AI보안 고급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선진적 인재 성장·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보안산업 뒷받침

- (고급 인력양성) 현장 수요 중심으로 화이트해커 교육 개편, AI 보안인력 양성 체계 마련
- (기반 확대) 5극3특 권역별 융합보안대학원 확대하고, 훈련·교육인프라 고도화 추진

④ (지역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중소기업의 사고 예방·대응 등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 (사고 예방대응)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10→16개) 확대,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예방·대응 지원
-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산업 클러스터(현재 동남·충청 2개)를 他 권역(1개소)으로 확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생태계 구축